

#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  
2017.1.23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sjkim4059@hansung.ac.kr

# < 목 차 >

1. 서론 – 촛불민심의 의미와 주의 사항
2. 재벌의 최근 현황 및 개혁 과제
3.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
  -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4. 재벌개혁의 단기 최우선 과제
5. 재벌개혁의 중기 과제
6. 재벌개혁의 장기 과제

# 1. 서론

- 촛불민심의 의미와 주의 사항

## □ 촛불민심

- 공정한 사회 요구
- 재벌도, 특히 삼성도 법 앞에서는 예외적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선언

## □ 주의 사항

- 첫째,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은 보수-진보의 이념적 과제 아니다.
  - 생경한 목표와 수단을 '개혁'의 이름으로 전면화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결과 초래
- 둘째, 광장의 요구와 경제환경 간의 괴리 증폭 – New Normal 시대
  - leader의 일관성 & follower의 인내심 제고가 개혁 성공의 요체
- 셋째, 정책수단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해야
  - 기존 개혁수단의 합리성 재검토 필요. 선명성 함정 경계해야
  - 기득권 논리 비판뿐 아니라 타성에 젖은 진보적 주장도 혁신해야

## □ 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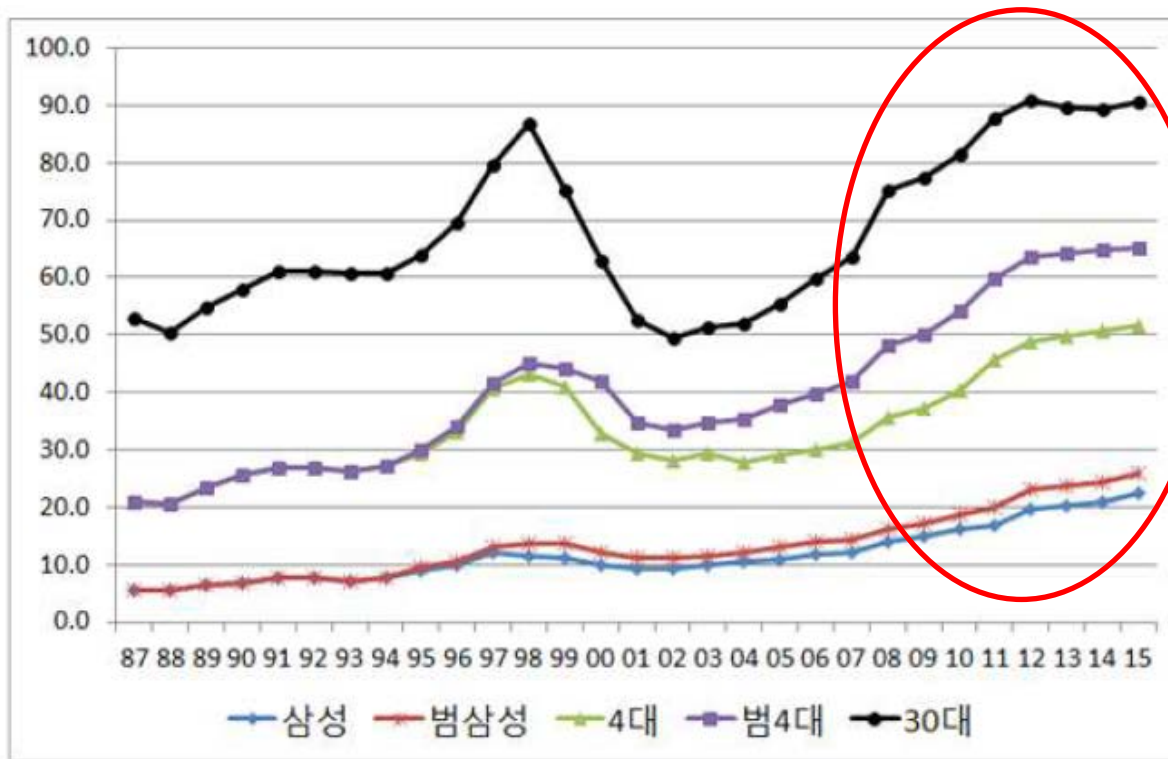
- 영역별 과제 분석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른 구분
- 단기 최우선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 2. 재벌의 최근 현황 및 개혁 과제

- (1)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심화
- (2) 하위재벌들의 부실(징후) 심화
- (3) 기업가정신을 상실한 재벌 3세
- (4) 소결

# (1)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심화

[그림 1] GDP 대비 재벌의 자산총액 비율 추이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 각년도

2002년을 저점으로  
경제력집중 급속심화

30대 재벌 대비 비중:  
삼성 1/5  
범삼성 1/4  
4대 재벌 1/2  
범4대 재벌 2/3

이제 한국은  
'30대 재벌의 공화국'  
이 아니라  
'4대 가문의 공화국'

## (2) 하위재벌들의 부실(징후) 심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10	현대중	305	52.44	503	90.81	184	31.56	197	20.06	160	15.81	155	4.68	160	2.23	196	-11.32
14	한진	243	1.60	346	0.49	428	0.14	388	0.50	559	-0.02	678	0.04	726	-0.16	864	0.71
15	한화	372	2.32	366	1.84	419	2.18	125	3.43	219	1.51	226	1.07	305	1.11	322	0.41
17	두산	405	3.65	441	1.24	412	0.71	366	2.09	412	2.04	405	0.89	244	1.50	253	1.43
22	LS	152	4.75	204	4.97	225	2.08	243	2.98	224	2.15	210	2.15	202	2.50	203	2.46
24	대우조선	450	9.53	880	32.48	442	5.81	297	6.37	278	7.36	256	3.11	301	2.21	326	3.34
25	금호	139	2.54	126	1.06	3,342	0.10	582	2.23	-	-	572	2.33	403	1.39	404	1.76
26	대림	141	6.23	198	3.84	172	2.92	164	2.45	152	3.20	178	4.17	174	1.66	201	-0.43
27	부영	1,793	1.15	1,543	3.57	1,916	9.27	342	4.23	333	13.75	327	10.48	344	7.19	367	6.34
28	동부	278	-0.06	260	0.20	272	0.04	250	-0.12	355	0.18	398	0.30	484	-0.20	864	-0.96
29	현대	201	1.83	224	2.92	335	-1.86	251	2.10	473	-0.83	895	-1.06	2,448	-0.53	960	-0.13
33	효성	277	3.29	250	2.34	225	2.69	242	2.12	326	0.69	311	0.82	375	1.95	301	2.69
34	대우건설	-	-	-	-	-	-	197	-1.64	197	1.21	200	2.06	282	-2.05	278	3.42
39	동국제강	213	3.03	227	6.52	164	0.39	206	1.63	222	1.25	227	-0.30	246	0.53	243	-0.08
40	코오롱	350	1.54	402	1.94	291	2.04	218	2.28	250	4.42	245	1.80	255	1.77	235	1.50
41	한진중	226	2.04	264	3.22	284	1.45	268	1.01	242	0.42	256	0.26	290	-0.58	316	-0.58
42	한라	-	-	-	-	-	-	-	-	263	3.19	271	0.33	300	0.41	214	1.37
45	한국지엠	213	9.72	828	5.32	397	2.39	207	4.18	187	15.60	307	-6.99	415	8.02	457	-1.11
49	현대산업	178	1.04	172	2.82	176	1.81	166	1.27	127	3.65	184	1.04	207	-1.65	169	2.60
52	이랜드	-	-	-	-	-	-	-	-	409	2.11	370	1.86	399	2.33	345	2.84
57	대성	154	2.36	129	2.23	125	1.72	184	3.69	176	0.69	218	0.57	218	-0.28	271	0.54
58	하이트	195	2.15	271	3.03	190	2.76	278	2.40	277	1.52	261	1.43	244	1.69	267	1.24
61	한솔	-	-	-	-	-	-	-	-	249	1.00	251	1.02	246	1.34	374	0.72

부채비율 200% 초과 &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그룹 추이 (이미 구조조정 들어간 5개 그룹 제외)  
 '07년 2개 → '08년 6개 → '09년 9개 → '10년 5개 → '11년 6개 → '12년 10개 → '13년 10개 → '14년 10개  
 ⇒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부실 상태

# (3) 기업가정신을 상실한 재벌 3세

## □ 창업 1세대

- 무에서 유를 창조한 Schumpeter적 의미의 기업가
- 정경유착 & 노조탄압 능력 포함

## □ 2세대

-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대거 등장
- 새로운 사업을 통한 경영능력 입증 욕구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1997 외환위기 때 다수 도산
- 살아남은 2세들은 재벌공화국의 주역으로 부상

## □ 3세대

- 왕국의 황태자, 온실 속의 화초, 도전정신 상실
- 정보 왜곡하는 가신들 (삼성 미래전략실 등 비공식 참모조직)
-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 이들의 경영능력 검증은?
- 향후 3세대 총수의 위상 및 역할은?



## (4) 소결

### □ 재벌개혁의 의미

-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 아니다. 단지 출발점
-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서민들 삶의 조건 개선: 특히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 해결

### □ 재벌개혁의 과제는 다양하며, 더욱이 충돌한다.

- (범)4대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 하위 부실(징후)재벌들의 구조조정
  - 지배구조 개선
- ⇒ 재벌체제의 위기: business와 governance의 동시 위기

### □ 재벌개혁은 지난한 진화의 과정 필요

- 2012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

### 3.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략

-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 (1) 환경 분석 - New Normal 시대의 생존전략은?
- (2) 재벌개혁 전략 -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 (1) 환경 분석

## – New Normal 시대의 생존전략은?

### □ 환경의 악화: New Normal 시대

- 2008 이후 저성장·불확실성이 '짧은 과도기' 아닌 '새로운 정상상태'
- New Normal 시대의 한국경제 미래는? 세 가지 차원의 요인
  - ① 세계경제 질서 : 글로벌화+ICT화, G2의 치킨 게임.
  - ② 동아시아 분업구조 : 상호의존 및 경쟁 심화, 특히 중국의 저주
  - ③ 국내 성장모델 : 낙수효과의 실종, 인구구조 변화
- 위 세 요인 모두 지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
- 특히 ①, ②는 외생변수 ⇒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 위협

### □ 주체 역량의 문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사회

-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소통 불능 +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페널티 부재
  - New Normal의 환경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더욱 부채질
- 탈출구는?
  - 근본주의적 접근, 진영논리로는 해결 불가능

## (2) 재벌개혁 전략

### -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 정치권과 대중의 인식에 일반화되어 있는 재벌개혁의 목표와 수단:  
87년 체제의 산물, “경제는 고도성장하고, 재벌은 돈을 벌었다.”
  - 대표적 예: 공정거래법 3장에 의한 재벌시책, 즉 행정규제
    - 당시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지금도 그 필요성 부인할 수 없다.
  - 그러나 행정규제의 코스트가 너무 커졌다.
    - 피규제 재벌의 기회주의적 행동 부추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 심화
- 주의 사항
  - 첫째, 재벌도 다양하다. 나아가 양극화되고 있다.
  - 둘째, 재벌개혁의 목표도 다양하다. 심지어 충돌하기도 한다.
  - 셋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하나는 아니다.
    - 사전규제 vs 사후감독, 강행규정 vs 활성화 규정, 민사·행정·형사
-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 New Normal 환경에서는 최선보다는 실현가능한 차선 추구해야

## 4. 재벌개혁의 단기 최우선 과제

- (1) 상법 개정
- (2)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 (3)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

# (1) 상법 개정

## □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

- ① 주주총회 활성화: 전자·서면투표제 도입
- ② 독립 이사 선임 가능성 제고: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 ③ 책임성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 □ 주의 사항

- 상법이 가장 기업친화적인 규율수단
  - 공정거래법 등 사전규제 장치를 보완·대체하는 수단
- 한편, 상법은 일반법: 재벌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
  - 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사항에 집중할 필요
-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미 담은 조항을 상법에 도입하기 어렵다.

## □ 전략적 판단

- ①과 ③에는 상당한 정도 공감대 형성
- ②의 조정이 관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중 하나만 도입

## (2)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 □ 최근의 환경 변화

- 삼성물산 합병에서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논란
- 만시지탄이나, Stewardship Code 제정·시행

### □ 제안 1: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 Stewardship Code 가입, 주주권행사 지침 제정 및 위원회 설치

### □ 제안 2: Stewardship Code의 실효성 제고

- “기관투자자간 공동행동에 관한 원칙”(collective engagement) 도입

### □ 제안 3: 자본시장법령 개정

- 5% rule 및 공동보유자 규정의 경직성 완화
- 가이드라인 발간 통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 (3)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명성 경쟁
  - 특히 출자총액제한 부활 및 기존 순환출자 규제 관련 논란
  -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다시는 거론하지 말아야.
  - 이들 이슈를 꺼내는 순간 이번에도 재벌개혁 실패할 것
  
-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 규제 기준(순자산의 몇%) 및 대상(몇대 재벌) 선정의 객관적 근거?
  - '정책공간 국민행동'은 10대 재벌 대상 순자산 30%로 부활 제안
  - 10대 재벌 다수가 이미 지주사 전환, 삼성에도 binding effect 없다.
  
- 기존 순환출자 규제?
  - 7개 그룹에만 순환출자 존재
  - 그 중 3개 그룹만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유의미한 역할
  - 2014년 말 공정위의 신규 순환출자(기존 순환출자 강화 포함) 규제 해석 가이드라인: 그 효과가 작지 않다.



## 5. 재벌개혁의 중기 과제

- (1) 금산분리 규율체계의 개선
- (2) 지주회사 제도 개선
- (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내지 완화
- (4)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1) 금산분리 규율체계의 개선

## □ 주의 사항

- 금산분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 그러나 그 실현 방법은 시대·국가·업종마다 다르고, 또 변화한다.
- 현재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가 금과옥조 아니다. 비합리적 요소 많다.

## ① 은산분리 규제체계의 재설계

### □ 현행 은산분리 규제의 문제

- 산업자본의 정의(이중 기준): 자산규모 2조원 or 자본비중 25% 초과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단일기준): 4%
- 미국은 거꾸로 되어 있다.
- 산업자본의 정의를 포함해서 은산분리 규제체계 전부를 재검토해야

###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해법

- 핀테크 발전방안에 대한 산업정책적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다.
- 특별법 또는 특례법 제정으로 마무리해야

## ② 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율체계의 재설계

### □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

- 너무 넓은 규제대상에 너무 일률적·경직적인 규제 방식 적용
- 금융산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 부작용: 기진출 재벌의 기득권 고착 &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 □ 현행 금융감독의 문제: 그룹 조직형태에 따른 규제격차 심각

- 지주회사그룹에만 통합감독 적용, 기타 그룹은 개별 감독
  - 재벌, 특히 삼성이 현재의 금산결합구조 유지할 수 있는 근본 배경

### □ 제안 1: 엄격한 사전규제 대상은 대형 금융(복합)그룹으로 좁혀야

- 삼성, 한화 & 미래, 교보, 한투 등이 핵심 규제 대상

### □ 제안 2: 그룹통합감독체계(group-wide supervision) 조속 도입해야

-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 그룹 단위 위험관리·지배구조
- 삼성 문제,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출자 문제 점진적 해소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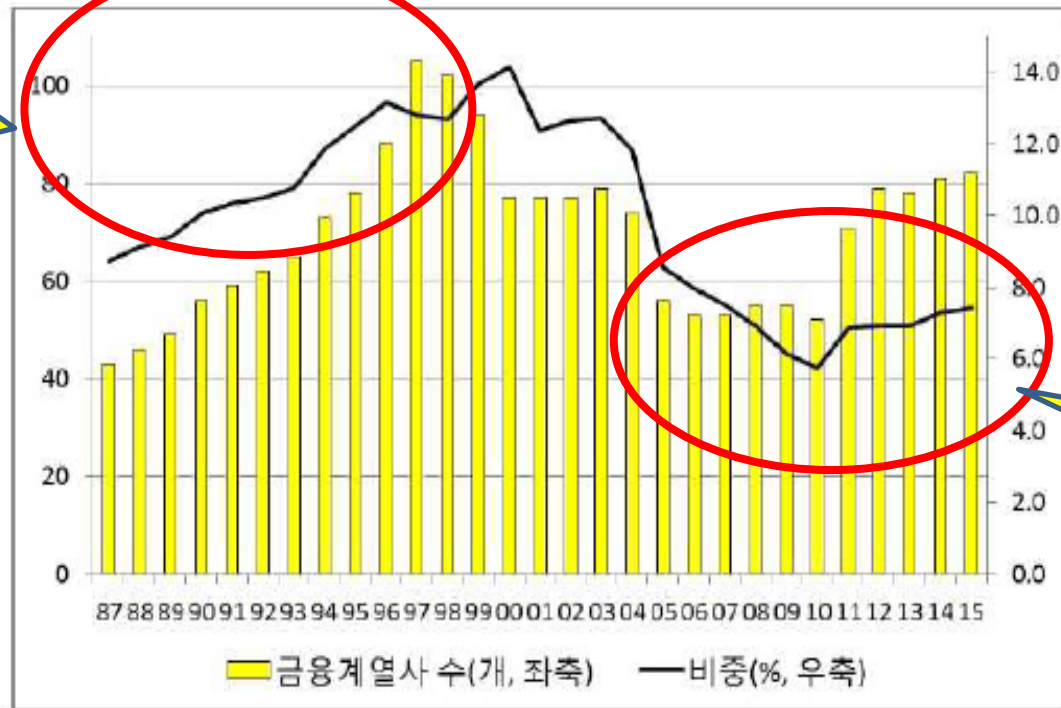
### □ 제안 3: 보험업법 개정(이종결법) - 계열사 지분 시가평가하도록

## 참고

### □ 비은행권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 외환위기, 카드대란 거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유인 감소
- 2008 위기 이후 금융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한계
-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 대상: 삼성·한화, 미래·교보·한투 등으로 축소

[그림 2] 30대 민간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및 전체 계열사 수 대비 비중 추이



현행 규제는  
80~90년대  
금산결합  
강화 추세를  
배경으로  
형성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규제방식  
발전시켜야

자료: 매년도 4월의 공정위 발표 자료

<표 3> 비은행권 자본총계 대비 주요 10개(11개) 금산결합그룹의 점유 비중 추이

	비은행권 자본총계 (조원)	점유 비중 (%)												
		1위 삼성	2위 한화	3위 미래	4위 교보	5위 현차	6위 한투	7위 동부	8위 현대	9위 롯데	10위 태광	* 동양	10개 합계	11개 합계
'02.4월	18.8	43.2	1.1	1.8	3.6	3.8	5.7	2.3	2.0	0.3	0.1	3.5	63.9	67.5
'03.4월	37.8	30.6	2.4	1.0	3.2	2.2	3.3	1.6	0.3	0.6	0.3	1.1	45.5	46.6
'04.4월	32.7	32.9	5.8	1.4	4.1	2.3	6.5	1.8	3.6	1.4	0.4	0.9	60.2	61.1
'05.4월	46.8	27.8	5.6	1.2	3.0	1.6	3.3	1.6	2.4	1.1	0.5	1.3	48.2	49.4
'06.4월	52.5	27.6	6.3	1.6	3.3	2.2	4.5	1.7	2.3	1.3	0.7	1.6	51.6	53.2
'07.4월	64.5	23.6	5.7	3.4	2.9	3.1	5.4	1.5	2.3	1.4	0.8	1.5	50.1	51.7
'08.4월	76.1	23.4	5.3	4.1	2.9	3.4	5.2	1.4	2.0	1.5	0.7	1.8	49.9	51.7
'09.4월	89.9	21.3	5.1	4.5	3.3	3.5	5.4	1.8	2.5	1.5	0.5	1.9	49.4	51.3
'10.4월	96.3	19.2	4.8	5.5	3.6	4.2	4.6	1.7	2.4	1.7	0.7	1.9	48.4	50.3
'11.4월	116.5	22.4	6.4	5.0	3.9	4.0	4.3	1.8	2.1	1.7	0.7	2.1	52.3	54.4
'12.4월	130.2	23.5	6.0	5.1	4.1	4.4	4.0	1.9	2.1	1.8	0.7	2.2	53.6	55.8
'13.4월	151.4	23.2	5.5	4.4	3.9	4.2	4.0	2.3	2.1	1.7	0.8	1.9	52.0	53.8
'14.4월	167.0	24.1	5.1	4.8	4.0	4.1	3.7	2.5	1.9	1.7	1.0	-	53.0	-
'15.4월	179.8	23.0	5.7	4.9	4.1	4.1	3.6	2.6	1.8	1.7	1.0	-	52.6	-

## (2) 지주회사 제도 개선

### □ 주의 사항

- 현대자본주의의 핵심 생산 주체는 not 개별기업, but 기업집단
  - 재벌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업집단 형태
- 공감대 형성: 지주회사체제가 투명하고 유연한 기업집단 조직형태
- 고민: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 인정 vs. 규율의 사각지대

### □ 선진국: 금융지주회사 외에 일반지주회사에는 특별한 규제 없다.

- 그럼에도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 보유하는 경향. 이유는?
  -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소송 등의 소송 압력 발생
  - 80% 이상 지분 보유해야 연결납세 등 조세편익 인정

### □ 제안 1: 다중대표소송 등 소송제도 도입

### □ 제안 2: 법인세법 개정

- 공정거래법의 자회사 지분 하한(20%, 40%) 상향이 유일 해법 아님.
- 법인세법상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이 보다 효과적

### (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내지 완화

#### □ 주의 사항

-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나라 많지 않다.
- 형사처벌하는 경우(예: 미국)에도 그 위반 유형은 한정적(예: 담합)
-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든 유형의 위반행위에 형사처벌 규정
  - 현 상태에서는 전속고발권 바로 폐지하기 어렵다.

#### □ 제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에 대한 제재체계 전체를 재검토

- hardcore 위반행위 선별하여 형사처벌 규정
- 그 외 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처벌(과징금, 3배 배상제) 강화
- 그 전제 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 (4)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하도급거래 관계를 私的自治 원리에 방임할 때의 문제
  - 한국의 독과점 산업구조에서 하도급거래는 본질적으로 甲乙관계
  - '경쟁자 보호 아닌 경쟁 보호'라는 정통적 관점에서는 치유 어렵다.
  
- 제안 1: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3배 배상 제도 전면 도입
  
- 제안 2: 사적자치 원리 일부 수정
  - 일정기준 초과하는 원사업자에 하도급거래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협력업체 리스트 및 집계화된 거래내역 공개
  - 1차 외에 2차·3차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관련 책임 부과
  
- 제안 3: 중소기업들 간의 공동사업을 담합규제에서 적극 예외 인정
  -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 경쟁력 강화



## 6. 재벌개혁의 장기 과제

- (1)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및 주주총회 승인 사항의 확대 -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
- (2) 노동자 또는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 - 신중한 검토 필요
- (3) (가칭)'대기업집단법' 제정

# (1)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및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확대 -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

## □ 문제

- M&A시 지배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20~30%)만 인수
- 대규모 자산(특히 주식) 인수 시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로  
⇒ 이러한 현실이 경제력 집중 및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부추겨  
- 출총제와 같은 둔탁한 수단이 아닌 시장친화적 규율방법 모색해야

## □ 제안 1: 유럽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 오랜 논란 끝에 2002년에 EU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 지배지분 취득 시 나머지 주주에 공개매수 제안, 50%+1주 취득해야  
- 지난 12개월 간의 거래 중 최고 가격으로 매수 제안  
-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 제안 2: 대규모 자산양수도 주주총회 승인

- 영국의 listing rule: 일정기준 초과 대규모 거래는 주총 승인 얻도록
- 인수회사 자기자본의 50% 초과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 (2) 노동자 또는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 - 신중한 검토 필요

### □ 주의 사항

- 일원적 이사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또는 특정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 더구나 이를 경제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하기는 어렵다.

### □ 대안

- 노동자 경영참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특정 부문(예: 공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형식으로
  - 이 경우에도 노조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 다만, 상법상 소주주주권의 한 형태로, 상당한 강한 요건(예컨대, 지분 3% 초과, 6개월 이상 보유)을 충족하는 주주가 주주제안 형식으로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에는, 적격성을 충족하는 한, 선임의무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3) (가칭)'대기업집단법' 제정

- 19C 말 비로소 법인의 주주 자격 허용 (1889년 뉴저지주 최초)
  - 모-자회사 관계 통해 기업집단 급속 확산, 20C의 새로운 현상
    -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은 미성숙, 글로벌 스탠다드 없다.
  - 기업집단의 시너지 효과 vs. 모회사의 기회주의적 행동
    - 양자를 균형시키는 경계선은? 모든 법경제학자의 관심사
  
- 19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절충적 기업집단법 논의 확산
  - 미국식의 conduct-based approach 또는 독일식의 situation-based approach라는 양 극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연결회계, 연결납세,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각각의 법 영역별로 기업집단법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최근의 기본 추세
  - 회사법에 기업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수단 도입 필요
    - but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에는 지배, 지배주주의 개념조차 부재

## □ 현행 규제체계의 딜레마

- 재벌개혁 시책을 공정거래법 3장에 두는 경우의 경직성
  - 일반법인 상법은 너무 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난점
  - 해결 방향: 현행 공정거래법 3장과 상법·금융법·세법 중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부 강화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여 제한된 범위의 대규모기업집단에만 적용
- ⇒ 기대 효과: 각 조항의 상호연관성을 종합 고려함으로써 과잉규제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규율수단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 □ 제안

- 새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법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공동의 특별위원회 구성
- 그 산하에 관련 정부부처 및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일정 기한 내에 대기기업집단법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 이를 기초로 각종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업집단법 제정안 초안을 작성·심의하도록

감사합니다.